

2011, 명동성당에서 생긴 일(4)

우리는 한국가톨릭의 발상지이며 그 역사의 중심지인 명동성당의 역사와 진화과정을 살펴왔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른바 ‘명동성당 재개발’을 그 시작과 전개과정으로 더듬어 가고 있다. 여기에 현 시점에서의 상황들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서 끝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측불허이다. 따라 가보는 수밖에 없다.

명동성당 재개발의 질곡, 그 중간과정

명동성당 재개발의 제1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보류되면서 문화재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3차례의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자문위원으로는 김정동, 김용수, 권기혁, 김정신, 윤홍로, 문영빈 제씨였다. 그 첫 번째 자문위원회는 2010년 4월 8일에 명동성당 교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림 1> 문화재자문회의가 열린 곳은 명동성당 교구청 소회의실이었는데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 추기경이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회의결과를 기다리다가 추기경이 나오자 악수를 청하는 사람은 명동성당 재개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적극 돕고 있다고 알려진 원정수씨이다. 그는 이 재개발 건축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주)간삼 인터내셔널의 고문이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명동성당 본당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아래 입증 자료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검토하기로 함. ① 명동성당 본당 기초 등 하부구조를 포함, 현 실태에 대한 정밀 구조진단 자료. ② 명동성당 하부 암반의 입체적 모식도 작성. ③ 조적조 건물임을 감안, 건물 신축 및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성당건물이 지하굴착에 따른 진동, 지하수위 변동, 지반 변이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확인 등.]이었다.

명동성당 서울교구측은 이에 따라 구조 안전성에 관한 지적 사항을 토목 관련 학회에 의뢰하였다고 알려졌다.

두 번째 자문위원회는 2010년 7월 28일, 대정 정부청사의 문화재청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1차 자문회의에서 지적 된 사항에 대한 제출서류의 문제점이 보완 제출토록 하였다. 그 내용은 [1) 성당 현 상태에 대한 정밀구조진단 자료와 관련하여 ① 2002년 자료가 아닌 2010년 현황분석자료를 제출(필요 부분 벽돌, 목재 등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한 자료를 포함), ② 성당 기초부 시굴조사, ③ 벽돌과의 접합 등을 포함한 목조트러스의 안전 상태 확인 자료 제출, 2) 하부 암반의 입체적 모식도와 관련하여 3D분석 자료를 작성 제출, 3) 지하수 위 변동 관련하여 성당 후면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자료 작성 제출. * 각 조사에 관련한 책임연구자 등을 명기, 서명 제출] 등이다.



<그림 2> 1차 자문회의가 끝난 후 위원들이 옛 주교관 뒤편에 들어와 주교관 건물을 관찰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결국 두 번째 자문회의에서도 문화재인 명동성당 건물의 안전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가톨릭의 100년이 넘는 성지로써 재개발 자체에 대한 그 부당성을 제기하기보다는 개발을 전제로 한 안전성 문제에 머무르는 한계를 가졌다. 이 같은 한계성은 결국 허가를 내주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견해도 불려왔다.

세 번째 자문회의는 2010년 10월 13일에 열렸다. 이때는 [명동성당 본당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등에 대한 보완자료 보고서의 검토결과 안전성에 대하여 확인함. 단, 종탑의 안전, 발굴부 단면도, 구조안전진단서 등도 포함하여 보완된 사항을 첨부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으로 회의 결과는 점차 구조적 문제점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귀결되어 갔다. 10월 26일에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최종 보완 제출’되었다는 내용까지 덧붙여졌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위원회가 열렸

다. 바로 2010년 11월 4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회의에서이다. 그러나 심의 결과는 ‘보류’였다.

다시 ‘보류’ 판정이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기술된 것은 지극히 간단하다. 명동성당 측에서 보면 엄청나게 성질 날 정도였다.

- 신축되는 교구청 신관의 건물 층수를 조정하도록 함.
- 명동성당의 진입로, 광장 등은 그 역사성이 보존되도록 함.

이였다. 결국 문화재위원회는 13층으로 짓는 새 건축물은 너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중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진입로 부분의 경사로, 광장은 지하층을 4개 층이나 파서 훼손하지 말고 보존시키라는 의미이다. 곧 지하 4개 층을 파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부질없는 물적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이다.

명동성당 서울대교구의 놀라운 생리, 전국주교회의와 정의구현사제단을 능멸

그 사이 필자에게는 놀라운 제보가 들어온다. 때는 2010년 8월 중순이다. 한 단체의 회의가 끝나고 식사자리에서 나눈 이야기 중에 문화재청 직원들과 전문위원이 청와대에 불려가 빨리 허가를 내주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제보는 한참 후에 한 언론사가 확인하여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필자가 들은 내용은 지난 8월 19일에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근대문화재과장, 담당사무관, 그리고 전문위원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불려서 청와대에 들어가 재개발에 대한 여론과 문화재위원회에서의 통과 전망,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인사는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야단맞았다’고 했다. ‘야단맞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쉽게 말해 ‘조인트 까졌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진실일까? 자초지종은 무엇인가?

이것은 명동성당 서울교구가 세 번째로 낸 명동성당 재개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지난 2010년 12월 2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받은 후 나타난 반응에서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 당시 서울교구장이기도 하였던 정진석추기경이 재개발 안이 허가되자마자 다음날 정부에 화답하여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기경의 이런 발언이 있자마자 한국 가톨릭 내부에서는 큰 파란이 일었다.

먼저 2010년 12월 10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 개발 찬성조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제단은 ‘추기경의 궤변’이라는 성명에서 추기경이 개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 발언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정부를 편들어 야만하는 남모르는 고충이라도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다”면서 “시중에 나도는 4대강 난개발과 명동성당 ‘불법개발’이 한 통속이라는 소문이 자꾸만 술깃하게 들린다”고 하면서 명동성당 개발을 허가 받는 대가로 4대강 개발을 찬성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사제단은 “더욱 심각한 사실은 사건을 밝힌 것이 아니라 주교회의의 결정을 함부로 왜곡하셨다는 점”이라며 정 추기경이 최고의결기구인 주교회의의 결정을 호도한 사실을 지적한 뒤, “추기경의 과오는 사도좌(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높은 가르침을 거슬렀다는

것과 이천년 교회전통인 주교단의 합의정신(sinodalitas)과 단체성(collegialitas)을 깨뜨린 이 두 가지부터 출발한다"고 꾸짖었다.

한편 12월 16일에 있었던 주교회의 정평위(위원장·이용훈 주교)에서도 정기총회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으로, 환경파괴와 자연 재해를 우려하는 학계의 견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채 국민적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내용과 절차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되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재조정되어야 할 불의한 사업이기에, 교회의 ‘4대강 사업’ 반대가 세상을 참된 가치를 바탕으로 복음화하고 올바른 인간의 길을 제시해야 할 교회의 본연의 사명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보다 훨씬 전인 2010년 3월 12일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당시 주교회의는 "춘계 총회에 모인 한국 천주교의 모든 주교들은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 나라 전역의 자연 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힌바 있다.¹⁾ 주교회의는 한국 천주교 최고의사결정기구로 3월 8일부터 4대강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여 11일까지 춘계 정기총회 등을 통해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주교들의 찬반 의견을 들었었다. 앞서 1500인 사제단 선언 때 5명의 주교가 참석한 바 있어 이번 주교회의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이 천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돌았고, 실제로 이날 주교회의가 반대 입장을 공식천명하게 된 것이었다.²⁾

정진석 추기경도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가

이같은 사태가 전개되자 한 사설은 다음과 같이 질타했다.

[사설]정진석 추기경의 발언과문과 언론의 왜곡

[말 그대로 이 정권은 분열과 갈등의 화신이다. 배척과 불통의 정치로 온 사회 곳곳에 파열음을 내왔던 이 정권이 기어이 종교계까지 갈등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불교계 봉은사 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가톨릭계가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 발언 파문’으로 분열과 불신의 깊은 내홍을 겪고 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이어 원로사제들이 정진석 추기경의 서울대교구장 ‘용퇴’까지를 촉구하기에 이르고 있다. 추기경이나 주교들에 대한 사제들의 문제제기는 드물기는 했지만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사제단과 원로 사제들이 추기경의 ‘용퇴’까지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한국 가톨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이처럼 웅변해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주교회의 결정까지를 왜곡한 정진석 추기경의 발언과 태도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 정권의 무지막지한 4대강 사업이 문제의 근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1)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사제선언문 ‘이제 우리가 강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2010. 3. 8.

2) [천주교 주교회의 ‘4대강사업 반대’ 회견전문]. ‘너희나 후손이 잘 되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2010. 3. 12.

사제단이 지적한 것처럼 여기에는 ‘명동성당 불법개발’과 연관된 모종의 거래가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다. 시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결국 종교계로까지 그 불통이 된 것이다. 시민들을 이편저편으로 편가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격돌시킨 것으로도 부족해 결국에는 사회 통합의 마지막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계까지 그 분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이명박 정권의 불통의 정치 행태가 낳은 불행한 사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추기경의 발언 과문이 이 정권의 불통 행태와 너무도 흡사하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특히 말과 언로의 왜곡과 오염이 그렇다. 정 추기경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교회의의 ‘4대강 선언’이 “주교단이 4대강 사업이 자연을 파괴하고 난개발의 위험을 보인다고 했지 반대한다는 소리는 안했다”고 말했다.

주교회의의 선언은 “오히려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개발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제단은 정 추기경의 이같은 발언이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주교회의의 결정을 함부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사제단이 ‘추기경의 궤변’이라는 거친 제목까지 달아 정 추기경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정 추기경이 단지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명백한 주교회의의 결정까지를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에 대해 사제들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종교의 핵심 가치인 ‘참’과 ‘거짓’의 분별력을 무참하게 부정한 것이다.

사제단은 또 정 추기경이 4대강 사업은 “자연과학자들이 다루는 문제요, 토목 공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다룰 문제이지 종교인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서도 주교회의의 결정 과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교회의의 결정은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여러 차례 경청하고, 닷새에 걸친 총회에서 전국 교구 주교들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전문가들의 영역이어서 종교인들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주교들의 분별력과 판단능력마저 부정했다는 것이다.

그 어느 곳보다 참과 거짓의 분별이 요구되는 종교계의 수장이 이런 말과 언로의 왜곡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뺄개치고,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면 서로 날치기를 예사로 일삼는 정치권의 오염된 언행이 마치 종교계로까지 변진 것 같아 더 그렇다. 부자감세를 고수하면서 ‘친서민’을 내세우고, 복지를 하겠다면서 전국토를 토목공사장화하겠다는 4대강 예산 때문에 정작 굶는 아이들 지원 예산마저 한 푼 없이 삭감해버린 앞뒤 다른 이명박 정권의 행태 역시 마찬가지다. 예사로 ‘흰 것도 검다’고 우기는 왜곡된 언론의 행태를 보는 듯 해 더 씁쓸하다.

사제단은 “4대강사업은 자연과학자들이 다룰 문제”라는 정 추기경의 발언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릴 줄 아는 분별의 힘이 아니라면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것은 말의 진실성이 실종된 우리 사회에 던지는 사제들의 물음이기도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과 언론인들은 이들 사제들의 물음을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중

교계까지 소통의 기초 단위인 말의 오염과 왜곡 때문에 이런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막다른 길목에 이르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이기 때문이다.]³⁾



<그림 3> 한국천주교 서울교구가 명동성당재개발 허가를 밀어붙이고 있는 동안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동토의 한겨울에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사진은 남한강 바위늪구비의 강 한 가운데서 중장비와 덤프트럭을 이용해 강바닥을 긁어내고 있는 모습. 2011. 1. 29.

명동성당재개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외줄타기

그렇다면 문화재위원회의 명동성당재개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는 어떻게 났을까?

즉, 지난 2010년 12월 2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한 ‘현상변경 허가’의 자초지종을 살펴보자.

11월 4일 2차 문화재위원회에서 ‘보류’판정을 내린 후 명동성당 서울교구 측은 11월 23일에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이 보완 서류는 당시로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후에 확인된 것은 신청한 건물을 한 층 낮추는 것이었다. 즉 13층 건물에서 한 층 낮춘 12층 건물로 재신청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문화재위원회가 요구한 ‘신축되는 교구청 신관의 건물 층수를 조정하도록 함’이라는 보류의 사유는 충족된 것일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켰다. 신축될 건물의 층수는 1개 층을 낮추는 것이었지만 결국 1만평이 넘는 신축면적 중 단지 300평을 줄이는 것이었고, 13층 중 옥탑층과 같은 가장 작은 층을 한 층 내리는 것이었다. 그 면적은 100평 정도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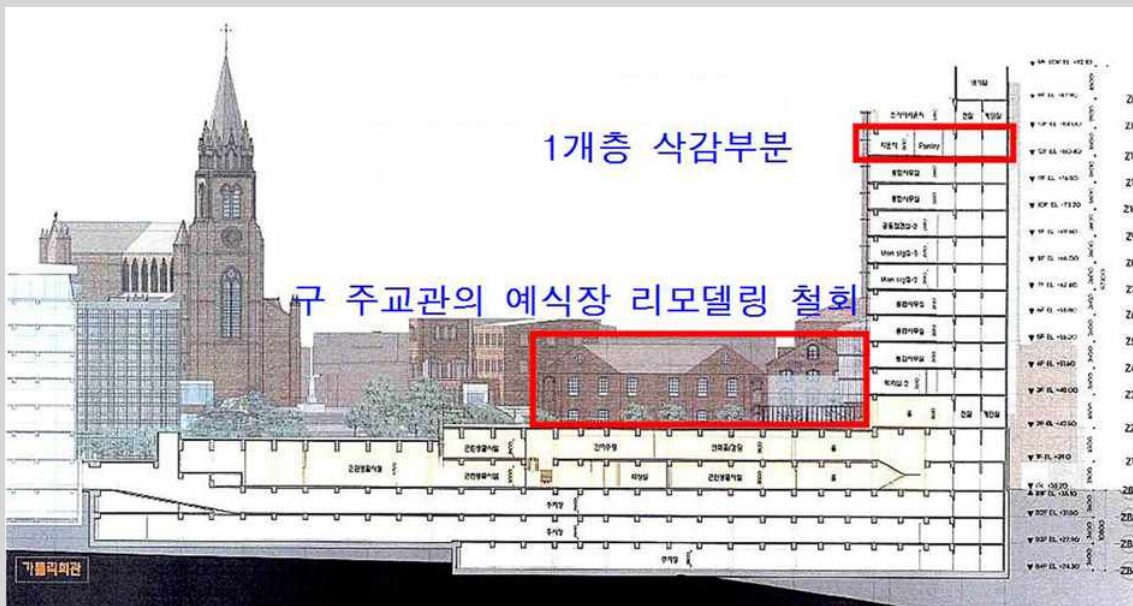
청와대의 압력과 일부위원들의 몸보신으로 무기력해진 문화재위원회는 요식행위처럼 ‘조건부 가결’로 허가를 해주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구 주교관 건물을 예식장(웨딩 채플)로 리모델링하려던 것을 철회한 것이었다.

3) [사설]정진석 추기경의 발언파문과 언론의 왜곡. 미디어오늘. 2010. 12. 1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09>

2. 층별 및 동별 면적개요

구분	용도	변경 전 (본심의 2차)				변경 후 (본심의 3차)				비고
		교구청신관 전입홀	다목적홀	교구청신관	소계	교구청신관 전입홀	전시홀 (구 주교관)	교구청신관	소계	
지마중	4	-	-	3,811.79	3,811.79	-	-	3,770.96	3,770.96	-40.83
	3	-	-	5,498.37	5,498.37	-	-	5,457.54	5,457.54	-40.83
	2	-	-	6,455.94	6,455.94	-	-	6,415.11	6,415.11	-40.83
	1	256.34	165.71	5,432.75	5,854.80	256.34	165.71	5,391.92	5,813.97	-40.83
	지상중 소계	256.34	165.71	21,198.85	21,620.90	256.34	165.71	21,035.53	21,457.58	-163.32
지상중	1	262.43	340.77	3,161.65	3,764.85	262.43	340.77	3,333.73	3,936.93	172.08
	2	205.28	70.95	1,872.51	2,148.74	205.28	340.77	1,062.57	1,608.62	-540.12
	3	209.84	-	930.16	1,140.00	209.84	-	978.76	1,188.60	48.60
	4	-	-	1,033.40	1,033.40	-	-	918.06	918.06	-115.34
	5	-	-	956.77	956.77	-	-	927.94	927.94	-28.83
	6	-	-	927.94	927.94	-	-	927.94	927.94	
	7	-	-	927.91	927.91	-	-	927.91	927.91	
	8	-	-	927.91	927.91	-	-	927.91	927.91	
	9	-	-	927.94	927.94	-	-	927.94	927.94	
	10	-	-	437.54	437.54	-	-	437.54	437.54	
	11	-	-	382.49	382.49	-	-	382.49	382.49	
	12	-	-	382.49	382.49	-	-	316.97	316.97	
	13	-	-	316.97	316.97	-	-	-	-	-382.49
	지상중 소계	677.55	411.72	13,185.68	14,274.95	677.55	681.54	12,069.76	13,428.85	-846.10
합계		933.89	577.43	34,384.53	35,895.85	933.89	847.25	33,105.29	34,886.43	-1,009.42



그렇다면 문화재위원회가 고군분투하여 강력한 조건부를 걸어 허가하였다는 조건들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볼 것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후 진행된 공사과정에서도 드러난 사실이다. 그 잘난 조건부의 조건들을 보자.

○ 현상변경 조건부 가결함.

- 단, 명동성당 본당에 대해 공사 전 충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공사 중 철저한 정밀계측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 및 훼손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장대석 기초부 포함).
- 공사 과정에 명동성당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또한, 이상 발생 시 즉시 공사 중지 후 안전대책 강구 및 원상복구 등을 소유자의 책임 하에 전액 자비 부담으로 하며,
- 소유자 및 시공자는 공사 추진 시 안전사고 등에 따른 모든 법률상의 책임 등을 지도록 함.
- 당해 문화재 보존 및 훼손 방지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위원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검토 시 명동성당 본당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주변 개발에 대한 시공·구조·안전·공사환경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토록 함.
- 명동성당으로의 진입로 개설, 주변 경관 조성 등은 그 역사성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위원(전문위원 포함) 자문을 받아 계획함.
- 신축건물 외관 디자인은 명동성당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 위원 자문을 받아 설계함.

위의 문서⁴⁾에 나타난 조건들은 그야말로 어느 현장에서나 따라 붙는 조건들인 것이다. 명동성당 문화재의 특별한 환경에 대해 특별한 조건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공사과정에 인접한 문화재급 건축물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아니다. 만약 문화재위원회가 진정 조건을 내세운다면 최소한 1977년에 문화재위원회가 가결한 명동성당 전체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구 주교관(1890년 준공)과 사회복지관(1927년 준공)을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조건을 걸었어야 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문화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음은 자명하다.

(계속) 본고는 미완성으로 인용은 삼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2. 1. 9.

김란기(한국역사문화정책연구원)

4)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안전번호 근대 2010-07-028.